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잠시 멈춤'

김제시 돌연 불참으로 협약식 잠정 연기... 도 "협의 통해 행정 광역화 실현할 것"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이 19일 김제시의 갑작스런 불참으로 잠정 연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유창희 정무수석은 19일 오전 초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협약식이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정무수석은 "긍정적인 협의를 통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고 국가 예산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이는 기존 행정구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려는 전략이다.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새만금 지역은 수도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3대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협약식이 19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김제시의 돌연 불참으로 연기가됐다.

▲**신항만 운영방식 갈등... 김제시 불참 이유는?**

협약식 연기의 핵심 쟁점은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이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신항만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만을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운영하는 '투포트(Two-Port)'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원포트'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오는 28일 해양수산부 중앙행정정책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김제시는 "전북도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협약식에 불참했다.

▲**전북자치도, "긍정적 협의 통해 조속한 추진"**

유창희 정무수석은 협약식 연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정무수석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하겠다"며 "행정이 광역화될수록 시너지 효과가 커지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행정 광역화가 필수적인 시대가 된 만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이 19일 초청 기자실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협약식 잠정 연기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 규제자유특구 통해 지역 혁신성장 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19일 초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도의 친환경 자동차 특구, 탄소 융복합산업 특구,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좋은 제도로 전북도는 이를 적극 활용해 신기술 실증 사업, 신제품 개발, 관련 법 개정, 기업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19일 초청 기자실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법 개정·투자유치 성과**

2019년 12월 지정된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등 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3건 개정, 587억원 규모 투자유치, 도의 기업 3개사 유치, 특허출원 26건 특허등록 21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LNG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80km → 700km로 약 2배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후

2025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전기 소방차 개발, 협소한 공간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탄소 복합재를 신소재로 적용 확대**

2020년 8월 지정된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탄소 복합재를 활용한 신소재 산업 실증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9일 업무교육·시무식 행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은 이미 일주일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표하고 계속해서 관련 후보 등록 절차 등이 진행됐다"며 "당시 참석한 정동영

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소 운송용 용기와 관련, 기존 금속 용기보다 저장량 증가(200kg → 300kg), 운영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차 물탱크와 관련해,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완료, 소화수 저장용량 13% 증가(3,000L → 3,400L)로 인해 출동 효율성이 강화되고 향후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4월 추가된 '탈부착 수소 용기 모듈 시스템' 실증 사업은 배터리를 대량 수송 용기 모듈을 적용해 동력 3배 증가 기대. 2025년 하반기 본격 실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친환경 자동차·탄소융복합 기능성식품 특구 지정 추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중**

전북자치도는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2024년 9월 후보 특구로 선정됐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등록 기능성 원료의 일반 식품 적용, 건강기능식품 공용공장 운영 실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6회 진행), 사업계획 지속 보완 중이며, 최종 지정 여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지속적인 규제 혁신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 예정**

이날 브리핑에서 신원식 국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2025년 전북 규제자유특구 혁신 네트워크 설명회'가 열려, 2026년 신규 실증 과제 발굴 논의도 진행됐다.

전북자치도에서 정책 입안 책임자가 신속하게 열린 도정을 통해 기자들에게 현안을 소상하게 밝혀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혁신 성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

지난해 1월 9일 업무교육 발언만 '유죄'... 직위 유지

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9일 이뤄진 업무교육 행사에서 한 발언 등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9일 업무교육·시무식 행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은 이미 일주일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표하고 계속해서 관련 후보 등록 절차 등이 진행됐다"며 "당시 참석한 정동영

에게 '백(Back)이 필요하다'는 식의 도움 요청은 피고인이 제22대 총선 당선을 위해 당시 참여한 소장들에게 지지를 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2월13일 있었던 같은 장소에서의 지지 발언을 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과 지난해 3월 4일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한 허위사실 공표의 점

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난 2023년 12월13일 여론조사 응답 유도 발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부터 약 4개월 전에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지난해 1월 2일 공직적인 출마 발표를 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당시 피고인은 계속해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 여론조사 역시도 제22대 총선과 큰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에 이 연설을 통해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

"상공인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민주 도당, 상공의 날 맞아... 경제 회복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제2회 상공의 날을 맞아 지역 상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원유 전주시의회 회장 겸 도당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기회의 희망을 열겠다"며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남 대변인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상공인 여러분 덕분"이라며, 6·25전쟁, 군부 독재, IMF 외환위기 등 어려운 시기마다 상공인들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이후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1.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원화 약세, 물가 상승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 극복해 온 만큼, 이번 경제 위기도 상공인과 도민이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낼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선봉에서 서서 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 대변인은 "제2회 상공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전북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치테러대책위 "살인미수 희화화, 용납 불가"

국힘 안철수 의원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9일 성명서를 내고 "정치테러를 조장하는 안철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안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테러 피해를 조롱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이 이 대표의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부산에서 목을 끊힌 뒤 죽은 듯 누워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지지자를 가한 범인에게 특수제작된 흉기로 목을 잘라는 안살 시도를 당했다. 그러나 당시 총리실이 이를 '열상'(긁힌 상처)으로 표현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해당 상위에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자상이었다고 강조하며, 배후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이 "굵했다"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 대표를 조롱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이 살인미수 피해자를 희화화한 것은 의사 윤리를 저버린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테러 왜곡 발언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의 '자극적' 발언에 이어, 안철수 의원이 가짜뉴스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극단주의 세력에게 정치테러를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할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치테러를 왜곡·조롱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만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에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이해식·박상혁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빈집 정비로 농어촌 공간구조 재편

민주 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특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9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나 위생상 유해·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빈집(특정빈집)은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지난 1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이날 심사한 14건의 안건들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정자 의원, 양운엽 의원, 전수관 의원, 총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이정자 의원은 가족

간 유대 약화로 효 문화가 희미해지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운엽 의원은 인구 감소 속에서도 금주·백산 등의 지역에서 인구 증가세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관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오승경 의원이 새만금 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 및 전북도 엄정 중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제=박노태 기자